

추석 연휴 '전날' 교통사고 가장 많아

사고 '사상자' 평소보다 사고 100건당 26명 더 많아 주택화재도 유의해야...음식조리 중 자리비움 등

행정안전부는 추석연휴, 귀성·귀경길 교통사고와 명절 음식 준비로 인한 화재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5년간(2018~2022년) 추석 전후 교통사고 현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추석을 전후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추석 연휴 전날로 평소(연간 일평균 579건)보다 1.4배 정도 많은 813건 발생했다.

명절에 발생하는 교통사고 건수는 평소보다 적지만, 사고 건수 대비 인명피해는 오히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추석 연휴에 발생한 교통사고 100건당 사상자 수는 173.9명으로 평소(100건당 147.7명)보다 26.2명 더 많았다.

고향으로 출발하기 전에는 엔진이나 제동장치 등 차량의 이상유무를 미리 점검하고, 타이어의 마모상태와 공기압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차량에 탑승하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철저히

하고, 특히 아이들은 체형에 맞는 차량용 안전의자(카시트)를 사용해야 한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디엠비(DMB) 등 영상을 시청하는 행동 등은 매우 위험하며, 주변에서 운전자의 주위를 산만하게 하는 행동이나 지나친 대화 등도 자제해 운전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운전 중에는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평소 익숙하지 않은 도로일수록 안전운전에 유의해야 한다. 장시간·장거리 운전 등으로 피곤하거나 졸리면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쉬어간다.

특히 명절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비율도 평소보다 2.9%포인트 정도 높는데,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하지 말아야 한다.

추석에는 평소보다 많은 명절음식 준비 등으로 가정 내 화기 사용이 늘면서 화재 예방에도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5년 간 추석 연휴에 발생한 화재는 총 1224

건으로, 이 중 주택화재는 평소 27.5%보다 높은 35.2%(431건)를 차지했다.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는 음식 조리 중 자리 비움, 담배꽂초, 불씨 등 화원방치와 가연물 근접방치 등의 부주의가 251건(68.2%)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전기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이 96건(22.3%), 전자기계 과열 등 기계적 요인이 18건(4.2%) 발생했다.

명절화재 예방을 위해 음식을 조리할 때는 화구 주변의 정리 정돈에 신경쓰고, 특히 불을 켜 놓은 채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한 이동식 가스레인지 등을 사용할 때는 근처에 불이 옮겨 붙기 쉬운 가연물(기름을 건넌 종이행주, 포장비닐 등)을 가까이 두지 않도록 한다.

주방용 전기제품을 사용할 때는 다른 전기용품과 문이발처럼 함께 꽂아 쓰면 과열돼 위험하기 때문에 콘센트는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올해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을 보내고 가족과 함께하는 즐겁고 풍요로운 추석이 될 수 있도록, 교통사고와 화재 등 안전수칙에 관심을 갖고 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완도소방, 생일119구급대 발대식 개최

완도소방서는 지난 22일 완도군 생일면에서 "생일119구급대 발대식" 행사를 진행하고 구급대 업무개시를 시작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구례소방, 추석명절 앞두고 안전보따리 사랑나눔봉사활동

구례소방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원거리 산림인접 모듬마을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22가구를 대상으로 "안전보따리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구례=박진호기자



신안소방, 긴급구조통제단 불시 대응훈련 실시

신안소방서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지휘체계 확립과 효율적 현장대응을 위한 긴급구조통제단 기능숙달 및 불시훈련을 21일에 실시했다.

신안=이덕주기자



화순경찰, 이상동기범죄 대비 '디지털 치안인프라 구축' 업무협약

화순경찰서는 지난 21일 이상동기범죄 대비 '디지털 치안인프라 구축'을 위해 화순경찰서·화순군청·KT광주지사 간 업무협약을 체결 하였다.

화순=박순철기자



장흥경찰, 사업용 차량 대상 교통사고예방 홍보

장흥경찰서는 22일 버스회사, 화물차 법인, 택시부를 방문하여 사업용차량 교통사고예방 홍보에 나섰다.

장흥=김도영기자



나주경찰, 추석 연휴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실시

나주경찰서는 지난 25일 영산포 풍물시장 앞에서 나주시청, 시니어 교통안전 지킴이 등 유관기관과 협력단체 합동으로 추석 연휴 교통사고 예방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나주=송준표기자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공직 제한 '평생→20년'...지방공무원법 입법예고

헌법재판소 "영구 제한, 과잉금지원칙 위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 제한 기간이 '영구'에서 '20년'으로 줄어든다. 이는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공무원 임용을 영구히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11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행안부는 "헌법재판소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파면·해임된 날 및 형이 확정된 날부터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한 현행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상 공무원임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며,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을 20년으로 제한한다"고 했다.

지난 2020년 헌법재판소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 때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한 '지방공무원법'상 임용 결격사유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상 근거도 신설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에는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등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인사상 우대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다자녀 양육자'도 우대대상에 추가됐다.

행안부는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양육환경을 고려한 전보 등 인사관리상 우대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직위해제자 결원 보충의 제한 기간도 줄어든다. 현행법상 형사 기소되거나 중대 비위로 조사·수사 중인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를 하는 경우 6개

월이 지나야 결원보충을 할 수 있었는데, 직위해제로 인해 장기간 지속되는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결원보충 제한 기간이 3개월로 단축한다.

또 각 기관의 원활한 징계절차 운영을 위한 규정을 정비한다. 행안부는 징계의결 요구권을 갖는 기관의 장이 수사기관에 징계사유에 관한 수사기록을 직접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밖에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의 개방형직위 간주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과학기술 분야 인재 등을 위해 기술직렬을 과학기술 직렬로 명칭 정비 등도 추진한다.

고기능 차관은 "지방시대의 주역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이 곧 정부의 경쟁력 척도"라며 "앞으로도 지역 스스로가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으로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슬비기자

명절 압포단속 건수 '0건'... 적발에 손놓은 철도운영사

철도운영사가 최근 5년간 압포단속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압포단속과 처벌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돼 이들의 관리감독의 권한을 쥐어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압포단속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20년 추석당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승차권을 부당 확보해 옷돈을 받고 판매한 압포상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고발 조치한 것이 유일하다.

특히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사경)가 최근 5년간 열차 승차권 압포단속현황에 '해당 없음'으로 답해 철도당국이 기차표 압포거래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차표 부정판매(압포)는 철도사업법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관련기관이 단속에 소홀히 하고 있어 처벌 규정은 무용지물과 다름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고나라와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사이트에서는 압포상들이 내놓은 표 가격은 용산발 광주 송정행 KTX 4만6800원을 7만8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코레일은 "단속과 과태료 부과에 대해 권한이 없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지난 2013년 2월 설날 명절 승차권을 두배가량 높여 압포를 판매한 매매상에 대해 즉결심판 처분 사례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열차 승차권 압포매매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국토부 및 철도운영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한 만큼 철도운영사에도 직접적인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시스



추석맞은 전통시장

추석을 맞은 24일 오후 서울 강북구 수유시장의 한 전집에서 시민들이 전을 구입하고 있다.

추석맞은 전통시장